

94.10.11

총무처의 여성공무원 시각

김미경 기자

총무처가 지난 7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 심의 자리에 제시한 자료는 정부가 여성공무원 증가현상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제대군인 가산제 관련 자료'라는 이름으로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총무처는 9급 시험에서 가산제를 없앨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의 37.9%에서 52.7%로 무려 14.8%나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뒤집어보면 현재의 가산제 때문에 9급 시험에서 평균 15%의 여성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통계로써 인정해준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계를 보는 총무처의 시각이다.

총무처는 "현재 상태로도 여성공무원이 너무 많아 주로 8·9급이 담당하는 출장·단속·현장업무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여성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들 업무

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행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9급에서 가산제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산제를 없애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3%에서 5.0%로 0.7%밖에 안 늘어나 '별 문제가 없는' 7급의 경우에만 현행 3~5%에서 1.5~2.5% 수준으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했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 야근이나 출장업무를 못해 남성공무원들이 골탕먹게 된다는 소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시장에 이어 여성 군수·파출소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장·현장지도감독을 못한다는 총무처의 전제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고 아이 키우기 때문이라면 탁아소를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여성공무원이 많아 생기는 문제는 여성진출을 막는 형태로가 아니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형태로 풀어야 할 것이다.